

초등학교, 학부모 민원전화 설치… 학교 방문땐 예약 필수

서울시교육청, 교원보호 종합대책
행동중재전문관 일반학교 투입
민원상담, 챗봇으로 단순문의 해결
1 학교 당 1 변호사… 법률 자문 도와

내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학부모 민원 등을 녹음할 수 있는 전화가 설치된다. 모든 학교에는 담당 변호사가 지정돼 교권침해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에 대응한다. 학부모는 학교를 방문할 때 카카오톡으로 예약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단순 반복 민원은 시교육청이 개발한 '24시간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를 통해 해소하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시교육청이 지난달 2일 긴급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시교육청은 내용을 한층 더 구체화했다.

◆ 행동중재전문관 등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 인력 배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이 1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청은 우선 생활지도 불응 학생에 대한 지도방안을 마련한다.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에 담긴 '교실 분리'가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구체적 지도 단계를 제시할 구상이다. 내달 개발 완료로 목표로 분리 방식, 분리 공간, 담당 인력 등에 대한 내용들이 담길 예정이다. 이후 11개 교육지원청 별로 교원 연수도 실시한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의 행동을 교사

가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인력도 양성해 파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0년간 쌓인 특수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 긍정적 행동지원(PBS, Positive Behavior Support)' 방식을 일반 학교에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PBS' 전문가는 행동중재전문관, 행동중재전문교사, 긍정적행동지원가로 구성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전문적 지식을 갖춘 '행동중재전문관'이 마치 오은영 박

사가 부모를 지원하듯 교사를 컨설팅한다"라며 "현재 본청에 2명 배치돼 있지만, 내년 3억6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권역별 교육지원청에 각 1명씩 4명을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동중재전문교사는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예방 및 중재한다. 교육청은 내년 1학기 행동중재전문교사를 양성해 희망하는 13개교에 2학기 시범운영 후 확대할 예정이다.

긍정적행동지원가는 퇴직 교원을 연수를 통해 활용한다. 위기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행동중재 계획을 점검하게 된다. 내년 3월 총 33명으로 시범운영 후 연차적으로 확대해 2026년 22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 챗봇이 단순 민원 담당… 학교마다 변호사

학부모 민원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 민원은 챗봇이 담당하고 방문 민원은 절차를 까다롭게 한다는 방침이다.

민원상담 챗봇은 학사일정, 입학, 현장체험학습 등 단순·반복적인 문의를 담당한다. 챗봇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

항은 콜센터1396 상담원을 연결해 1대1 채팅 혹은 전화로 답변하는 방식이다.

교내 유선 전화에는 녹음 기능을 갖춘다. 시교육청은 예산 30억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 가능 전화를 구축할 방침이다.

학교 방문 상담을 원하면, 학교별 카오프네일을 통해 예약 후 승인받아야 한다. 교육청은 이 같은 사전예약시스템을 올해 11월부터 희망학교 88개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2학기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별도 상담실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감시시스템을 설치해 예기치 못한 위험상황을 감지한다.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 등에 대한 대응체계도 갖춘다. '1학교당 1변호사(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학교가 필요할 때마다 법률 자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내년 학교당 265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 교육지원청에는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보호 신속대응팀(SEM119)'을 신설한다.

/글·사진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수능·모평 출제교사 24명, 학원에 문항 판매했다

교육부, 교사 자진신고 기간 운영
322명 접수… 24명 고소·수사의뢰
4명, 수능 업무방해 혐의 즉시 고소

교육부가 지난 달 사교육업체와의 영리행위를 자진신고한 교사 중 기존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총 24명을 확인하고 이들을 고소·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세종청사에서 장상운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달 1일부터 14일



교육부가 19일 세종청사에서 장상운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한 가운데, 지난 달 사교육업체와의 영리행위를 자진신고한 교사 중 기존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총 24명을 고소·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322명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이들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교차 검증한 결과,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아울러 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에도 참여한 교사를 확인했다.

교육부는 이들의 문항 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해 총 24명의 현직 교사에게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고소·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교육부는 기존의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4명에 대해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한다. 아울러,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22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금지의 의무위반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되는 교사 22명과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업체 등 21곳 또한 동일한 혐의로 수사의뢰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수능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4학년도 수능시험 출제진 구성 시,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과 협의해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를 철저히 배제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내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부터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부적절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병무청의 후속 조치 현황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병무청과 협의해 관련 사교육업체에 대해 전문연구요원 배치 추천을 제한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전문연구요원이 프로그램 개발 등 분야가 아닌, 국어 수능 모의고사 지문 작성 업무 등을 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교육업체를 고발하고 해당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복무연장 및 수사의뢰 조치를 할 계획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상운 교육부차관은 "사교육 카르텔은 이미 은밀하게 뿌리를 내려 수능 시험 공정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청년 세대 병역의무 공정성까지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라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함께 고질적인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 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오세훈,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항공 고도제한 완화' 요청

건축물 높이 제약에 도시 발전 더뎠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개정안을 조속히 시행해줄 것을 건의했다.

북미를 출장 중인 오 시장은 17일 오전 11시 30분(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이하 ICAO)' 본부를 방문해 살바토레 사키타노 ICAO 이사회의장과 면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ICAO'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의 발전·증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UN 산하 전문기구다.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에 가입해 2001년 처음 이사국에 선정된 이후 8연속 이사국으로 선임돼 현재까지 참여 중이다.

면담은 의장 집무실에서 35분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도시 발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항공 규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규정 개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사키타노 의장은 1951년 제정 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낮은 항공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현재 ICAO에서 안전성 평가와 고도제한 완화 연구조사를 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30일까지 회원국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정 개정안은 2025년 이사회의결 후 2028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강서구, 양천구 등 공항 인접 자치구(약 80km², 서울시 면적의 13.2%)는 1958년 김포공항 개항 이후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받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도시 발전이 더딘 지역 내 낙후된 주거 형태가 밀집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기자 hjk10

파주시, '똑버스' 이용자중심 서비스 개선

대기장소 수 조정 등 불편 해소

파주시는 누적 사용자 40만 명을 돌파한 똑버스의 운영 효율화를 통해 이용자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경기도 시범사업에 최초 선정되어 지난 2021년 12월 운정지구와 교하지구를 대상으로 운영을 개시한 '파주 똑버스'는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서비스 대상 구역이 넓고 이용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이에 파주시는 똑버스에 대한 운영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다. 똑버스는 최초 9대로 운영을 개시했으나

이용객 증가에 따라 예비차 1대를 투입해 현재 1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심야 대중교통수단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24시까지였던 운행 시간을 1시간 연장해 25시까지 운행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경기교통공사('똑타' 앱 운영사) 및 현대자동차(앱 개발사) 등과 협의를 거쳐 ▲지역별 수요에 따른 '똑버스 대기장소 수 조정' ▲신도시 입주 진행됨에 따라 기존 가상정류소를 노선버스 정류장으로 통합하는 '가상정류소 미운행'을 9월 중 실시 완료하고,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현황 분석 및 점검 등 '똑타' 앱을 기반으로 운영체계를 상시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